전남 공공시설물 내진율 최하위

36.9% 불과…전국 평균 못미쳐
이달초 해남서 74회 지진 발생
도의회 도정 질문서 대책 촉구

전남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5월 초 해남에서 최대 규모 3.1을 비롯한 70여 회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일 의원(해남1·농수산위원장)의 도정질문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전남지역 공공시설물 2501 곳 중 내진확보 건물은 924곳 (36.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평균 내진율 58.2%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전남은 특히 강원지역 34.1%를 제외하면 내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88.7%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80.8%, 서울시 75%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982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669개(68.1%)가 내진 확보 건물로 분류됐다. 반면, 강원과 전남에 이어, 경북 45.7%, 충남 47.9%, 충북 50% 순으로 낮았다.

기상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74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3일 밤 10시 7분께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흑두일원에서는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고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 지진도 5차례 있었다.

평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남에서 짧은 기간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10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68건으로 신안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수 17건, 해남 5건 등의 순이었다.

김성일 의원은 이날 도정 질의에서 "내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영광 한빛원전과 영산강 하굿둑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상당수 전남지역 공공건물이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지어져 내진율이 낮다"면서 "2022년까지 내진율을 6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영광 한빛원전은 지진 규모 7.0, 영산강 하굿둑은 규모 6.9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며 "해남 지진 이후 주민 지진대피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상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제인권교육 주제 발표하는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국제인권교육 개회식에서 '5·18 광주정신을 통한 인권도시 조성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기 위해 지난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발표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순천대 의대 유치…양질 의료 서비스 제공"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
해룡면 선거구 원상회복 주력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상생·협력하는 정치 보여줄 것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62)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은 19일 "순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급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 당선인은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이날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순천은 과거 의대 유치를 희망했지만 그로부터 한 걸음도 못 나간 게 사실"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동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기획해 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순천시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남 동남권 당선인들, 순천시청, 지방의원과 원팀을 구성해 힘을 모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법 논의가 국방위에서 논의하다 행안위로 넘어가서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여 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 당선인은 "여순사건의 경우 좁게는 인근 지역, 크게는 전라남북도, 경남까지 피해자들이 있기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적절한 보상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3년 개최가 확정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 당선인은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냐, 현상유지적인 퇴보이냐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소 당선인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경제활동 방식과 사회적 교류 방법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는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등원 후 과거의 대립하던 낡은 정치 문화를 버리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하여 어려워진 우리 순천의 전통 시장, 소상공인들, 농민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과 관련해선 "기형적으로 조정된 해룡면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하겠다. 전남의 중심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게 선거구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 선거구 쪼개기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인구 5만5000명의 순천시 해룡면을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 광양시 등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불거졌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획정이었으나 순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 기준(27만명)을 넘어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았던 터라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과 소 당선인을 괴롭혔던 사안이다.

소 당선인은 선거구 획정 논란 등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준 시민들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지역민에게 약속했다.

소 당선인은 "저는 앞으로 검찰에 있을 때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소 당선인은 순천시 해룡면 출신이다. 순천 성동초와 순천중,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 퇴직 후 변호사의 길 대신 대학 강단을 선택해 순천대와 농협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전략공천 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마이크로 의료로봇 구축사업' 선정

첨단산단에 조성…일자리 1천개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마이크로 의료로봇 개발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82억원 등 총 309억원을 투입해 마이크로 의료로봇,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 지원센터는 북구 첨단 산업단지에 8800㎡ 규모로 구축된다.

지원센터는 임상용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GMP) 기준에 적합한 시제품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 기술의 안정성과 의료적 효능 검증을 위한 동물 활용 성능 평가시설 및 장비, 기업 입주와 공동 활용 공간 등을 설치해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수행기관인 (재)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은 이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전 실적과 세계 최다 특허를 출원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1개, 제품 브랜드화 3개, 벤처기업 5개를 육성하고 1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지역기업 연구역량 강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공모

전남도는 지역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한다.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내 142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연구개발 인력채용 165명을 비롯 지식재산권 147건, 학술실적 84건 등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전·현직 국회의원 아름다운 만남

군공항 이전 등 지역현안 논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광산 선거구 출신 국회의원과 당선인을 초청, 지역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 16일 김동철, 권은희 국회의원과 21대 이용빈, 민형배 당선인 등을 초청해 지역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만남을 갖고 저녁을 함께 했다고 19일 밝혔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만남은 김 구청장이 마련한 당선 축하자리에서 민형배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만큼 선배 국회의원의 노고에 보답하는 등 의정 활동의 연계를 위한 회동'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국회 일정상 4사람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회동이 성사된 것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모임에선 송정역 개발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주된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선 김동철 의원은 "지역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선택이 중요하다"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도 "이번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광주의 한 국회의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